

논평에 대한 답변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노길명 교수께서는 저명한 종교사회학자답게 필자가 본 논문에서 간과하거나 소홀하게 다룬 부분들을 잘 보완해 주고, 지적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로서는 노교수의 논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기능 중에는 개인의 삶에 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말씀 등이 그렇다. 본고에서 그런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해 주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것은 본 논문의 의도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기능”에 맞추어져 있기에 그렇다.

다음으로, “선교”와 관련된 문제가 혼재 되어 있다고 하였다. 노교수께서는 선교를 직접 선교와 사회선교로 나누어 보면서, 필자의 논문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이 두 분야가 뒤섞여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는 스위스의 저명한 선교학자이며 종교학자인 프리들리(R. Friedli) 교수의 문하생으로 10여 년간 수학하였다. 그분의 이론에 따라, 본인도 ‘선교’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즉 “하느님의 인간을 향한 가이없는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삶 전체”(디도서 3, 4 참조)라고 말이다. 그렇게 본다면, 선교라는 개념 안에는 새로운 신자들을 불러모으는 ‘새복음화’, 기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으로서의 ‘재복음화’,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개선하는 ‘사회복음화’가 모두 포함된다. 필자가 본고에서 사용한 ‘선교’라는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 밝힌다.

논평자께서는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내세워주의 신앙에서 탈피하여 실제 삶에 관심을 두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1970년대라는 필자의 논조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교갈등은 1960년대에도 있었으며, 1950년대에 이미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교회의 반대투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더 거슬러 올라가 실제로는 교회 창립기부터 정교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도 물론 교회 초창기

부터 교회와 사회 사이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던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전에 발생하였던 정교간 갈등이 1970년대 이후 한국 가톨릭의 대사회 활동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고 본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상황은 대동소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 혹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이나 전세계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전환이 있었다는 점이다. 필자로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논평자는 사회적 모순의 심화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본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였다. 필자의 소견으로도, 민족화해와 사회복지를 위한 한국 가톨릭 교회의 활동은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비중 있고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다. 민족화해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전망에 대하여서는 본고에서 부족하나마 언급한 부분이 있기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히 살펴보겠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1999년 6월 21일자로 펴낸 『천주교사회복지편람 1999』를 보면, 1999년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 시설이나 기관의 수는 524개로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는 결핵, 교정, 나환우, 노인, 상담, 아동, 여성, 의료, 장애인, 종합, 청소년, 행려인복지, 기타 복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대교구 지역에 110개, 대구대교구 지역에 65개, 광주대교구 지역에 60개, 부산교구 지역에 58개, 수원교구 지역에 42개, 인천교구 지역에 40개 시설이나 기관이 포진해 있어 주로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동 편람, 6-7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998년 9월 문화관광부가 조사 집계한 ‘종교계 사회봉사단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종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은 157곳이며, 그 중에서 천주교가 운영하는 시설은 111곳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평화신문, 1999. 4. 18.자, 11면). 천주교가 사회복지 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은 이와 같은 통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를 적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60%가 넘는 교회가 여전히 5% 미만의 예산을 복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평화신문, 1997. 12.21.자, 8면). 복지 사업은 여전히 일회성 자선 활동에 그치고 마는 수준이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IMF 구제금융사태의 여파로 복지기관의 숫자도 줄어든 형편이다. 전반적으로 교회의 복지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1997년 당시 651개이던 복지기관의 숫자가 1999년 현재는 524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들을 위한 복지활동이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교회의 복지활동이 일부 성직자나 수도자, 그리고 몇몇 뜻 있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최대 장점인 전체 교회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